

세계 5대 식품 강국을 위한 식품안전정책 추진방향

Directions of Food Safety Policies for the world's top five food powers



글 | 金東述
(Kim Dong Sul)

- 식품기술사
- 의학박사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첨가물기준과장

E-mail: dongsulkim@daum.net

Following the relocation of the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KFDA) to the Osong Bio-Health Technopolis in 2011, KFDA established 6 development strategies for Global Top 5 by 2020. 6 detailed strategies aim at systematic support for corresponding to the necessity of risk management and an instantaneous response according to environmental changes which have ever-present hazard, and to the development of Fusion Technology-combined new technology. These comprehensive strategies pursue to improve the quality of national life through wise food and drug consumption. Contents for future development is a summary of KFDA's Major Work Plan 2011 related food safety policies. The Plan was released in reception hall of the Blue House on Dec. 22, 2010.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11년도를 오송 원년으로 설정하고 미래비전 2020에 의해 설정된 세계 5대 식품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6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6대 핵심과제는 상시적 위험 사회진입에 따른 위해관리 및 신속대치의 필요성과 신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발전속도에 상응하기 위한 체계적 지원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아울러 국민의 현명한 식의약 소비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한다. 이 내용은 지난해 12월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발표된 식약청 2011년 주요 업무계획의 내용 중 식품안전관리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I. 2011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 1) 상시적 위험사회 진입에 따른 사전 위해관리 및 신속대처 중요
 - 국경을 초월(borderless)한 신종 유해물질에 의한 위험 증가
 - ※ 매년 신종 유해 화학물질 200여종이 국내로 유입
 - 신기술·융복합 기술 발달에 따른 종합적인 안전성 평가 및 관리 체계 마련
 - ※ 인체 안전성 및 위해성 평가기술 격차 : 한국(8.6년), EU(1.7년), 일본(4.3년)

- 국민의 안전 기대치가 증대됨에 따라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전예방 원칙*의 적용 강화
- * 미국, EU, 일본 등 사전예방을 위한 식의약품 관련 규제 강화 추세

〈핵심 추진과제〉

- ◆ 사전 예방적 위해관리 시스템 선진화
- ◆ 원료에서 소비까지 더 촘촘한 안전관리

2) 신기술을 활용한 첨단 융복합제품 발전 속도에 상응하는 체계적 지원 요구

- 세계의 바이오의약품 등 보건산업 연평균 성장률은 7%(국내시장 10%) 수준으로 계속 확대될 전망
 - ※ 분야별 세계시장 성장률 : 바이오의약품(20%), 화장품(8.3%), 식품(7%), 의료기기(7.7%) 등
- 웰빙 트렌드 및 BINT 등 기술력 향상으로 유헤스케어, 첨단 융복합 제품이 등장하고 있어 체계적인 허가 지원
- 영세하고 대외 기술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산업계 지원 강화
 - ※ 식품·의료기기(80%가 영세 업체), 의약품(상위 20대사가 전체 50% 생산), 원료의약품 자급률(21.4%), 고부가가치 의료기기 자급률(5% 이하)
- 국제교역 확대로 기준·규격의 국제화 요구, 글로벌 수준의 안전기준 선진화를 위한 식의약 규제개선

〈핵심 추진과제〉

- ◆ 경쟁력 있는 신성장 산업 발전 지원
- ◆ 자율과 공정을 촉진하는 식의약 규제개혁

3) 선제적 위기대응을 위한 소통 및 국내외 협력 강화 요구 증대

-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확산으로 국민과 상시 소통이 중요하게 대두
 -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생활밀착형 정보 수시제공 및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
- 안전관리 영역 확장 및 안전문제 글로벌화로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내외 공동협력 체계 구축 강화

〈핵심 추진과제〉

- ◆ 안전공감 확산을 위한 소통 활성화
- ◆ 안전기반 확충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

II. 추진방향

비전	식의약 안전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민 건강 확보
미션	국민 건강 보호·증진과 식의약 안전 확보를 위한 예방, 대응, 지원



III. 6대 핵심 추진과제

1. 사전 예방적 위해관리 시스템 선진화
2. 원료에서 소비까지 더 촘촘한 안전관리
3. 경쟁력 있는 신성장 산업 발전 지원
4. 자율과 공정을 촉진하는 식의약 규제 개혁
5. 안전공감 확산을 위한 소통 활성화
6. 안전기반 확충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

1. 사전 예방적 위해관리 시스템 선진화

1) '식·의약 안전 선진화 3개년 계획' 수립 으로 국민 건강권 보호

- 미 FDA, 유럽 등 선진국과 기능·예산 등을 비교·분석하여 안전관리 취약점 보완 및 선진 시스템 확충을 위한 계획 수립(2월)
- 식습관 변화 등을 반영한 유해물질 관리수준 재평가(5년 주기)
 - 과학적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해물질 노출량을 안전한 수준으로 관리
- 연령별 영양관리 실천 로드맵 마련 및 비만 예방 시스템(e-Nutri System) 구축(6월)
 - 식생활 서구화에 대응한 체계적 영양관리 실천 문화 확산 추진
 - ※ 한국인 비만 사회경제적 비용 : 1조 8,239억원('08, 국민건강보험공단)

2) 새로운 위해에 대한 안전기준 신설 및 개선

- 최신의 과학적 근거로 안전기준 재설정 및 국제적으로 미설정 되었으나 우리나라에 필요한 안전기준의 선제적 설정
 - 기후변화에 대응한 식품안전 위해요소(신종 미생물, 바이러스 등) 예측 프로그램 등을 통한 식의약품 안전기준 마련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등의 노출수준 분석 및 위해평가를 통한 관리기준 마련(12월)
- BINT 기술을 응용한 융복합 제품 안전관리 대책 마련
 - 나노물질 사용제품 안전 종합대책 마련(6월) 및 신소재식품 안전관리 전략 수립(6월)

3) 정책대상별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한 식생활 개선 및 영양관리 강화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 운영(9개소, 4월)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및 영양 교육 실시
- 연령·임산부 대상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 제공 확대('10년, 896성분 → '11년, 1,100성분)
- 실버식품 유형 신설, 대한노인회에 허위·과대광고 예방을 위한신고창구 개설(1월) 및 '실버감시단(전국지회 245개)' 운영
- 비만 등 성인병 예방을 위한 식생활 실천 문화 확산
 - 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하여 '나트륨 섭취 줄이기 시범 특구' 운영 및 급식·외식업체 대상 저나트륨 식단 제공 시범사업 실시(3월)
 - '칼로리 카운트' 환경 조성을 위한 영양성분 함량 DB 구축 및 영양정보 제공 확대(10월)
 - 건강한 식품 선택을 위한 외식 영양표시 자율참여 확대
 - ※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40개 → 100개) 및 대중음식점(시범사업, 8월~)

4) 식중독 원인 규명 과학화를 통한 예방 철저

- 식중독균 유전자 DB 활용한 오염경로 역추적 관리 실시(5월)
 - 식중독균의 분자역학적 특성 파악을 위한 유전자형 DB 구축 및 생산·유통 단계별 계통조사 실시
- 독소형 식중독균(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

높균 등) 사고 대응을 위한 생물안전실험실(BL3) 설치 및 분석 전문인력 양성교육 (7월~)

2. 원료에서 소비까지 더 촘촘한 안전관리

□ 현장중심의 식품안전관리체계 강화

- 제품 수거검사를 체계화하고, 각종 보고시스템*과 통합한 IT기반 ‘e-식품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운영(8월)

* 1일 상황보고시스템,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 무작위 표본검사프로그램, 위해식품 판매 자동차단시스템, 긴급회수 TV 자막방송 등

- 지도·점검 및 수입식품 수거검사 과정에서 실시간 보고 및 전파로 중복검사 방지 등 위해발생 신속대처

※ 태블릿PC를 보급(1,200대)하여 지자체 식품안전관리 활동 지원

- 위해식품판매 자동차단시스템 확대로 안전식품 구매여건 마련
- 대형유통업체 100% 적용(10,772개) 및 소규모업체(2,000개)로 확대 추진
- 주류 안전관리기준 마련, 지도·단속 강화 등 종합대책 수립(1월)
- 수입식품 검사항목 조정, 집중검사 실시 및 검사명령제 도입으로 위해수입식품 중점 관리
- 식품 HACCP 확대(1,031개 → 1,500개) 및 우수위생기준* 도입 추진
- * 위생조건, 원료선택, 위해요소 관리수칙 등 우수 위생관리 프로그램

3. 경쟁력 있는 신성장 산업 발전 지원

- 천연물외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품화 개발 촉진
-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위한 기능성

원료 인정 확대

- 기능성 소재 탐색부터 제품화 단계까지 정보제공 및 기술 컨설팅 강화

※ 눈, 피부 등 건강 관련 다양한 기능성 발굴 촉진

- 투자비용 감소 및 개발기간 단축이 가능하도록 천연물외약품 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전통한약 지식을 바탕으로 천연물 외약품 개발 지원 고시 제정(3월)

- 다양한 제형 개발 및 건강보험 지출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한약제제 활성화 추진(9월)
- 표준제조기준을 마련하여 다빈도 한약제제 제품 개발 촉진

4. 자율과 공정을 촉진하는 식의약 규제개혁

- 1) 산업계 자율 확대를 위한 제로베이스 규제개혁 선도(총리실 협조)

- 안전과 경쟁력이 선순환하는 전면적인 규제개혁 추진
- 국민생활과 밀접한 3대 분야 47개 세부과제 선정·추진

식품 주요과제

- 대상별 HACCP 기준 합리화 등 정책 수용도 제고
- 어린이식품 규제개선으로 국민 불편 해소
- 중소영세 업체 식품안전 기술지원 확대 등

- 규제개혁 추진 동력 강화로 실효성 있는 과제 지속 발굴

-「열린마루(분야별 CEO 간담회)」,
「Dynamic BIO*(바이오의약품 산업발
전전략 기획단)」,「의료기기 미래포럼」
정례화

2) 처벌·처분기준 합리적 조정으로 산업계
의 자율과 책임 강화

- 상습·고의적 식의약 위해사범 처벌 대폭
강화로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형 집행의
실효성 제고(대법원 협조)
- 유해성 정도에 따른 행정처분 재설정 추진
- 처분기준과 기간을 조정하고, 부당이익
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 등

5. 안전공감 확산을 위한 소통 활성화

1) 리스크 소통 체계화 및 채널 다양화

- 평상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활동 강화,
평가 및 환류
- 위해정보평가위원회 구성·운영(2월),
기관 신뢰도 정기 조사 실시(분기별 1회)
및 이해관계자 위해인식도 조사(9월)
-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활용한 세
대별 필요 정보 제공
※ 어린이(만화, 키드넷), 청소년(트위터,
유튜브), 어르신(신문, 방송) 등
- 증대하는 온라인상 의사소통에 적극 대응
을 위한 ‘사이버 대변인’ 제도를 운영하여
지식답변 등 실시간 제공(3월)

2) 대상별 생활밀착형 정보제공 확대

- 중금속, 식품첨가물 등 국민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 교육·홍보 계획 수립(4월)
※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역주민 식품안전
교실 시범사업 실시 등

- 어린이의 올바른 식품 선택을 위한 영양관
리 게임 프로그램 개발(8월), 임산부를 위
한 다양한 식생활정보 수집·평가 및 제공

6. 안전기반 확충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

1) 식의약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 확대

-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분야 컨설팅업체
양성화를 위한 ‘자율등록제’ 도입(1월)
- 신제품 개발 촉진을 위한 관계 부처와
R&D 등 협력체계 가동
※ 교과부(신약개발), 중기청(보건산업육성
지원단), 농진청(식의약 소재)

2) 시험검사기관의 국제적 신뢰성 확보

- 우수 시험검사기관 표준모델 보급 및 시
험검사 시스템 평가제 도입으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시험검사기관의 검사역
량 강화
- 시험검사기관 통합관리 법안 마련 및 국내
외(국내 81개, 국외 9개국 51개) 시험검사
업무협력 네트워크 구축(10월)

3) 글로벌 식의약 네트워크 주도 및 상호협
력 강화

- Asian-INFOFAN 및 중국, 베트남 등과
네트워크 구축(6월) 추진
※ INFOFAN : WHO/FAO가 운영하는
국가간 식품안전정보 교류 네트워크
- 한·중·일 민족적요인 공동 임상연구 등
의약품 개발 상호협력
- 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 표준화를 위한
WHO 협력센터 운영

〈원고접수일 2011년 6월 15일(수)〉